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7 호
의 결 연 월 일	2021. 1. 13. (제 1 차)

의
결
사
항

투에스대부(주)에 대한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연월일	2021. 1. 13.

1. 의결주문

투에스대부(주)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

2. 제안이유

투에스대부(주)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 의무,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, 총자산한도 및 과잉대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투에스대부(주)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과잉대부의 금지) 제1항 및 제2항, 제7조의3(총자산한도) 제1항 및 제2항, 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 제3항, 제9조의4(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 양수·추심 금지 등) 제2항, 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 제6항 및 제7항, [별표1]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3(과잉대부의 금지) 제1항 및 제2항, 제4조의4(총자산한도) 제1항 및 제2항, 제5조(이자율의 제한) 제5항

- 舊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2018.11.13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4조의3(과잉대부의 금지) 제1항 및 제2항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 제3조(연체이자율의 상한 등) 제1항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18조(임원에 대한 제재) 제1항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11.19.) 심의필

<별지>

투에스대부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1. 조치내용

□ 임원에 대한 조치

- 대표이사 김윤숙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권고 상당) 통보

2. 조치사유

가.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 의무 위반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해 대부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*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체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,

*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(3%)을 합산한 이자율

- (1) 2019.6.25. 연체이자율 상한규제가 시행되자 약정이자율은 연 24%로 하되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을 8.9%~20%로 감면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변경*하여, 2019.6.25.~2019.11.27. 기간 중 ○○○ 등 채무자 268명과 연체이자율 상한(11.9%~23.0%)을 1.0%p~12.1%p 초과하는 대부계약 380건(337억 33백만원)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,

* 기존 양식(주택담보대출) : 약정이자율(8.9%~20% 수준), 연체이자율(24%)

변경 양식(주택담보대출) : 약정이자율 24%(연체가 없는 경우 이자 감면 4.0%p~15.1%p), 연체이자 없음

- (2) 상기 계약에 따라 채무자 ◇◇◇ 등 65명(대부 85건, 80억 93백만원)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(27백만원)*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

* 연체기간(1일~72일) 동안 연체이자 상한은 167백만원이나 194백만원을 수취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3조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
3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 제3조

나.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의무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- 2019.3.14.~2019.10.18.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○○○○대부중개 및 ○○○○대부중개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◇◇◇◇ 등 231명에게 대부 231건, 222억 28백만원을 취급*한 사실이 있음

* 상상인대부중개(2019.3.7. 대부중개업 폐업)에 3억 3백만원, 제이에치대부중개(2019.8.7. 대부중개업 폐업)에 3억 17백만원 등 중개수수료로 총 6억 20백만원을 지급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

다. 총자산한도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- 201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*를 초과(291억 21백만원)한 사실이 있음

* 646억 32백만원(자기자본 64억 63백만원 × 10), 총자산 937억 53백만원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

라. 과잉대부 금지 위반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- 2017.1.1.~2019.9.26. 기간 중 ◇◇◇ 등 155명과 대부계약(190건, 134억 73백만원)을 체결하면서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3

관 계 법 규

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
제7조(과잉대부의 금지)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함. 다만,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·재산·부채상황·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의3(총자산한도)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(이하 "총자산한도"라 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)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.

제9조의4(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·추심 금지 등) ① (생략)

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(이하 "미등록대부중개업자"라 한다)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,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
2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대부업자 등에 대한 주의·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·경고·문책의 요구

2.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

3. 직원의 면직 요구

⑦ 금융위원회는 퇴임·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·재직 중이었다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·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, 그 내용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<별표1>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(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)

1.~9. (생략)

10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

11. (생략)

11의2.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
12.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

13.~16. (생략)

17.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

18.~25. (생략)

□ 舊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8.11.13. 시행되기 직전의 것)

제4조의3(과잉대부의 금지)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
1.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

가. 「소득세법」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통장 사본,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

나.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. 다만,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한다.

다. 부동산 등기권리증,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)

라. 그 밖에 소득,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

2.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

가. 감사보고서(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)

나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
다.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

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300만원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.

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의3(과잉대부의 금지)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
1.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

가. 「소득세법」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통장 사본,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

나.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. 다만,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한다.

다. 부동산 등기권리증,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)

라. 신용정보조회 결과

마. 그 밖에 소득,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

2.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

가. 감사보고서(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)

나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,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
다. 제1호나목, 다목 및 마목의 서류

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.

1.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: 100만원

2.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: 300만원

제4조의4(총자산한도)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"란 10배를 말한다.

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「상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이자율의 제한)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, 연체금의 관리비용, 연체금액, 연체기간,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.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의4(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)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
② (생략)

<별표2>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(제7조의4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.

나. (생략)

다.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해 당 조 문	행 정 처 분 기 준		
		1회	2회	3회
파. 법 제7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	-	영업 일부정지 3월	영업 일부정지 6월
거.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7호	영업 전부정지 6월	등록취소	-
너.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	법 제13조제1항제1호	영업 일부정지 1월	영업 일부정지 3월	영업 일부정지 6월
더.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7호	영업 전부정지 6월	등록취소	-
어.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다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	법 제13조 제1항제1호, 제2항제7호	영업 전부정지 6월	등록취소	-

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[시행 2019. 6. 25.] [금융위원회고시 제2019-27호, 2019. 6. 12., 일부개정.]

제3조(연체이자율의 상한 등)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.

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제18조(임원에 대한 제재) ① 금융위설치법,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임권고(해임요구, 개선(改選)요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
 - 가. 고의로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
 - 나.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
 - 다.~바. (생략)
2.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 - 가. (생략)
 - 나. 위법·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
3. 문책 경고
 - 가.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
 - 나.~사. (생략)
4. 주의적 경고
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·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
5. 주의
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·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투에스대부(주)*

* 대 표 자 : 김윤숙

등록번호 : 2018-금감원-1618(대부업) (2020.8.4. 폐업)

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7길 13, 5층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. 1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 관	과태료 5백만원
임 원 (1명)	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권고 상당) 통보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 의무 위반

- ☐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에 대해 대부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*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체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,

*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(3%)을 합산한 이자율

- (1) 2019.6.25. 연체이자율 상한규제가 시행되자 약정이자율은 연 24%로 하되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을 8.9%~20%로 감면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변경*하여, 2019.6.25.~2019.11.27. 기간 중 ○○○ 등 채무자 268명과 연체이자율 상한(11.9%~23.0%)을 1.0%p~12.1%p 초과하는 대부계약 380건(337억 33백만원)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,

* 기존 양식(주택담보대출) : 약정이자율(8.9%~20% 수준), 연체이자율(24%)

변경 양식(주택담보대출) : 약정이자율 24%(연체하지 않는 경우 이자 감면 4.0%p~15.1%p), 연체이자 없음

- (2) 상기 계약에 따라 채무자 ◇◇◇ 등 65명(대부 85건, 80억 93백만원) 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(27백만원)*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

* 연체기간(1일~72일) 동안 연체이자 상한은 167백만원이나 194백만원을 수취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3조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
3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 제3조

나.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의무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 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- 2019.3.14.~2019.10.18. 기간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인 ○○○대부중개 및 ○○○대부중개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◇◇◇ 등 231명에게 대부 231건, 222억 28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4

다. 총자산한도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- 201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*를 초과(291억 21백만원)한 사실이 있음

* 646억 32백만원(자기자본 64억 63백만원 × 10), 총자산 937억 53백만원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

라. 과잉대부 금지 위반

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 거래상대방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- 2017.1.1.~2019.9.26. 기간 중 ◇◇◇ 등 155명과 대부계약(190건, 134억 73백만원)을 체결하면서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3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가계금융과	여신금융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513	02-3145-8272